

투데이 칼럼

지진, 우리에게는 아직도 낯선 재난인가?

지난 4월 19일 강원 동해안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하자 3일 만에 경북 울진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잇달아 발생했다. 둘 다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이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없었으나 기상청에서 발표한 국내 지진 발생추이 현황(규모 3.0이상)으로 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에서 연 평균 40여회 발생하던 지진은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로 2016년 252회, 2017년 223회, 2018년 115회 일어났다.

계속되는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대비할 수 있는 안전수칙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르면 지진으로 건물에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잡아야 한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림이 지속되는



정 윤 희

전북119안전체험관 교관

시간은 수초에서 길어야 1~2분 내외로 그 사이 치명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탁자 등이 없을 때에는 주변의 사물을 이용하여 머리를 보호하는데 베개, 쿠션, 가방 등이 유용하다.

흔들림이 멈췄을 때에는 집에 있을 경우라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실제로 포항에서 2018년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고장난 현관 문개방

건으로 11건의 신고가 접수됐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나가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갑작스런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이용 중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한 채 건물이나 담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지진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진은 생소하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증폭되는 지진의 특성 상 신속한 행동에 따라 안전이 좌우되기 때문에 평소 지진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7년 포항지진 때 대처 방법을 교육받은 대학생들이 평소 훈련하던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대피하던 모습은 이러한 점을 증명한다.

전북 119안전체험관에서는 단순히 이론교육으로 재난의 위험성을 강조한 데 그치지 않고, 지진을 포함한 다양한 재난들을 대비한 안전수칙들을 가족, 동료와 함께 경험하며 직접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이 설치돼 있다. '볼 여행주간'을 맞이하여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배우며 더 이상 지진과 같은 재난이 마냥 두렵거나 낯설지 않도록 체험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해본다.

독자제언

가정폭력,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과거에는 가정 내 문제에 경찰이 개입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단순 폭력이 아닌 살인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초동 단계부터 경찰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상습·고질적으로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할 경우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 사회봉사·수감명령, 보호관찰 등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처벌보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제도가 있다.

처벌 없이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통해 가해자의 폭력적 성향을 교정하며 또한 피해자도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은 부부싸움 뿐만 아니라 존속폭력,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는 결국 학교폭력이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경향이 있다.

이름이 알려진 강력법들을 면담한 결과, 그들 중 다수가 어린 시절 아동학대를 당해서 일어났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시달렸다고 한다.

이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사람들과 원만하게 감정을 나누기 어렵고, 사회에 부적응자가 되기 쉽다.

따라서 가정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자신이 당했던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어버린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이 단순 '가정 안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초기대응을 위해 숨기지 말고 112로 신고해야 한다.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태훈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뉴욕서 '아우슈비츠 전시회' 개막을 앞두고



미국 뉴욕의 유대인 유산 박물관에서 오는 8일(이하 현지시간) 열리는 '아우슈비츠: 열마 전, 열지 않은 곳' 전시회를 앞두고 전시장에 아우슈비츠에서 발견된 인공과 신발이 전시돼 있다. 이 전시회는 2020년 1월 3일까지 열린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문 대통령 '내용 있는 협치' 의미심장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사회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2년을 앞두고 국정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듣는 자리였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협치 복원, 당쟁 인사, 소독주도성장·탈원전과 같은 정책기조의 재점검 등 다양한 주제를 내놓았다. 윤여준 정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이 나서서 정국을 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널리 인재를 등용해달라"고 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권 반란점을 맞아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토대로 한 협치' '중복프레임 체결'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폐 청산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반헌법적인 만큼 타협하기 쉽지 않다. 진상 규명, 청산이 이뤄진 다음 새로운 나라를 만들지만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중복프레임을 없애는 데 본인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을 맞아

원칙 없는 타협이나 내용이 불투명한 협치보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낡은 이념대립 극복을 통한 '내용 있는 협치'와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내년 총선에서도 개혁성을 앞세워 국민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의 정국 운영을 펼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협치를 위해 더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말했다.

협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야당의 비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이념공세를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협치의 상당한 장애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이 나서서 정국을 푸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하다. '원칙 없는 타협'은 경제해야겠지만 큰 틀의 협치를 복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먼저 열린 자세를 보이는 건 필요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 이해 어려워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여야 4당에 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비판했다. 당시 해외순방 중임에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할 만큼 작심 발언으로 보인다. 문 총장의 주장은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됨으로써 경찰에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한 뒤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기 석 달 정도를 남겨 놓은 문무일 총장의 발언은 검찰을 떠나는 입장에서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조직을 향한 메시지로 보인다. 떠나는 마당에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한 총정을 보여준 셈이다. 그만큼 조직의 힘이 강대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그 조직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문 총장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임기 말에 '작심 발언'이 나왔는가 하는 점이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는 오랫동안 나왔던 검찰개혁 방안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맡았다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함께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자세 아닌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반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총장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혹여 공약을 모르고 총장직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럴 지금까지 뭘 했다는 말인가. 임기 채우려 권력 눈치나 보다가 퇴직 직전에야 몸담고 있는 조직을 위해 '한 건' 하고 나가겠다는 것인가.

문 총장의 발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국회의 패스트트랙 논의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가 아니라 말인가.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이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위헌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인가. 선거제도가 혁신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신분으로 국회 논의의 방식을 비판하고 심지어 재논의까지 촉구한 것은 국회의 위상과 합의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과유불급'이다.

문 총장 말대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차선책이다. 이해가 짧았다면 말을 아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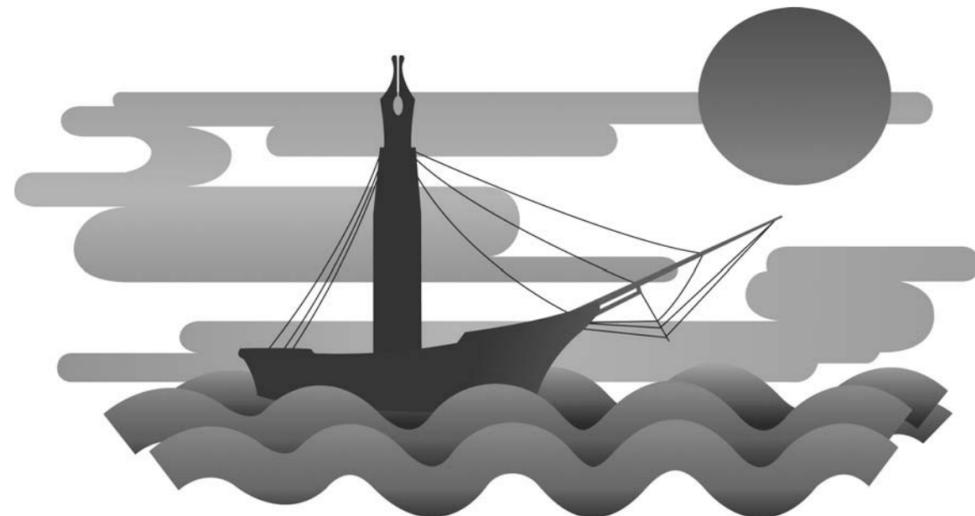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분별 있게 행동하길 바라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